

June 2026
No. 383

INSS

전략보고

상호호혜적 동맹 현대화와 한미 간 균형점

고명현
mhgo@inss.re.kr

- I. 동맹 현대화: 왜 지금인가?
 - II. 한미 간 동맹 현대화 인식과 목적 분석
 - III.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한미 간 합의점 및 쟁점
 - IV. 상호호혜적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부록: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한미 간 합의·이견 영역 대조표

상호호혜적 동맹 현대화와 한미 간 균형점

I. 동맹 현대화: 왜 지금인가?

II. 한미 간 동맹 현대화 인식과 목적 분석

1. 미국의 인식과 목적
2. 한국의 인식과 목적

III.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한미 간 합의점 및 쟁점

1. 합의 영역
2. 쟁점 영역

IV. 상호호혜적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수평적 동맹
2. 선제적 동맹 리스크 관리
3. 중국에 대한 한미 간 적절한 인식의 간극 관리

부록: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한미 간 합의·이견 영역 대조표

상호호혜적 동맹 현대화와 한미 간 균형점

저자 | 고명현

국문 초록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전략적 위험을 내포한다.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는 흐름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 분담, 남북관계, 주변국과의 마찰이라는 도전이 수반될 것이다. 동맹은 더 수평적이고 한국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나, 한국은 미중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전환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이 각각 발표된 후 동맹 현대화에 대한 미국 측 시각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2026년 4월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는 동맹 현대화 구상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반도 관여 부담을 줄이려는 백악관과, 한국을 인태전략의 핵심축으로 편입하려는 미 의회·미군 간에 동맹 현대화의 지향점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도 드러난다.

동맹 현대화의 성공 여부는 세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 첫째, 다영역 협력과 방산·조선 등 상호의존성 창출을 통한 수평적 동맹의 실현이다. 둘째, 한국 주도의 의제 선점과 백악관·의회·미군 간 다층적 조율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이다. 셋째, 한미 간 간극을 유발하는 대중 위협인식을 공통된 전략 소통 언어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주제어: 동맹 현대화, 한미동맹, 인태전략, 한반도

I 동맹 현대화: 왜 지금인가?

- 동맹 현대화는 확정된 개념이라기보다 미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해 ‘구성되고 있는’ 담론
 - 한미 양국 모두 중요성을 강조하나, 정의와 우선순위, 위협 인식에서 실질적 차이 존재
-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국방안보전략(NDS)가 공개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동맹 현대화 로드맵이 구체화 됨
- 초당적 ‘동맹 현대화’ 개념: 前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열린 제56차 SCM(2024)에서 등장한 ‘동맹 현대화’는 트럼프 2기에 들어 “연합태세 적응, 상호운용성 심화, 전 영역 협력 확대”로 정의¹

■ 미국의 ‘동맹 현대화’ 프레임

-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대중 역지를 위한 군사력 재배치 필요성에 트럼프 ‘미 우선주의 2.0’를 접목
 - 동맹 부담 분담 확대와 군사력 재균형으로 구체화
- 동맹 현대화 담론은 백악관이 주도하나, 미 의회와 미군의 손을 거치면 변화: 백악관 → 한국의 방위 부담
미군 → 대중 견제
 - 4월 열린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관을 재확인하고 하원 군사청문회에서는 올해 초 발표된 국방전략백서와 달리 한국이 제1도련선의 일부이자 대중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 확인
 -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건조 승인’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 해군은 핵잠의 대중 견제 역할을 더 부각

■ 한국의 ‘동맹 현대화’ 프레임

- 미국의 동맹 전략 재조정과 보조를 맞추되, 한반도 중심성을 유지하면서 주변국과 협력을 선별적으로 확대
 - 용어에 담긴 딜레마: 한국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지향하며 ‘동맹 현대화’에 담긴 미국 중심 동맹 재편 의도에 상호호혜적 방향성을 반영

1 연합뉴스. (2025.8.8). 美 “동맹현대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역지력 확보 위한 것.”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8152100071>

- 한미 간 분기점: 미국 동맹 현대화 개념은 역외 지향적이고 대중 견제를 목표, 한국 개념은 한반도 중심이며 대북 억지에 초점
 - 미국의 동맹 현대화 → “탈한반도 지정학”; 한국의 동맹 현대화 → “한반도 중심성”이라는 간극 존재²
 - 대중 견해 차이: 미국은 한미동맹과 인태전략 간 명확한 연결을 원하나, 한국은 유연한 태도 견지
- 한미 간 전략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공동 지향점이 존재하며, 양국은 이를 동력 삼아 동맹 현대화 추진 중
 - 전략권 전환: 한국은 주권 강화, 미국은 동맹 재균형 차원에서 적극 추진
 - 한국의 전략적 역량 강화: 親 트럼프 성향 미 조야는 스스로 방어하는 동맹국의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을 지지³
- 한미 팩트시트(대미 투자·핵추진잠수함) 이행과 동맹 현대화 추진은 냉전 종식 이후 한미 관계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
 - 동맹의 범위와 깊이를 동시에 확장할 기회이면서도 비용 부담·대중 관계·연루 리스크
- 동맹 현대화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과도 백악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와도 섬세한 조율 필요

² 반길주 (2026). 과도기 국제질서의 동맹 생존 기제 분석: 제도-자산 융합기제와 한미동맹 현대화. 국가안보와 전략, 26(1), 1-37.

³ Kavanagh, J. (2025, October 4). A stronger alliance requires a self-reliant South Korea. Korea on Point. https://koreaponpoint.org/articles/article_detail.php?idx=462

II 한미 간 동맹 현대화 인식과 목적 분석

1. 미국의 인식과 목적

- **후견-피후견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을 지향:**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동맹을 '위계 관계에서 상호 협력체로', '일방적 의존에서 진정한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 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한반도 관여 축소가 아닌 역량 강화를 의미: 서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
- 대중국 억제를 동맹의 핵심 동기
- 대중 억제가 미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여 예산과 전력을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것이 워싱턴 조야에서 초당적 합의로 굳어지는 추세
 -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2026.4.22.)에서 새뮤얼 파파로 (Samuel Paparo) 인태사령부 사령관은 발언에서 국방전략(NDS)의 4개 노력선(본토 방어, 중국 억제, 부담 분담 심화, 방산 기반 강화) 모두 인태 전구에서 구현된다는 점 강조
 - 2024년 이후 중국이 핵잠수함·항공모함·순양함·구축함 등 30척 이상을 취역시킨 해군력 팽창을 경고하며, 동맹과 협력 필요성 부각
 - 중국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도체 90%, 공작기계 70%를 공급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중국을 사실상 '공통된 위협의 배후(common organizing threat)'로 규정
 -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2026.4.22.)에서 파파로 사령관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CRINK) 연대 강화 부각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연결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및 역내 역할 확대
- 한반도 시각을 넘어 강대국 경쟁이라는 넓은 프리즘으로 안보 이익을 볼 것을 기대
-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뿐 아니라 대중 견제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고 신호
 -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이 한반도 서쪽을 주시하면서 대북 임무에 대해서는 핵심적이거나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개념을 공식 천명,⁴ 주한미군의 주 임무가 한반도 방어에서 인태사령부 임무로 전환됨을 사실상 교리화

4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도태평양사-주한미군 전력태세 청문회,” 제119대 의회, 제2회기 (2026.4.21)

- 브린슨은 한국이 '제1도련선 안에 (interior lines)'에 위치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을 제1도련선의 북방 고정 앵커(anchor)로 지정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제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비용 부과(cost imposition)에 있다고 언급
- 더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동해에서는 러시아에, 서해에서는 중국에 비용을 여기하고, 동시에 현 상태의 북한을 억제"하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

■ 방산 협력 고도화

-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 차원에서 해상에서 지상까지 MRO 협력 확대
- 한국 조선소에서의 미 해군 함정 MRO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경쟁력을 확보 및 미 해군 배치를 유지하는 상호 이익 방안 고려
 - 한국의 역내 무기 수출(예: 필리핀)을 지역 안정 기여로 환영하나, 한미 방산 간 산업 경쟁 최소화 기대

■ 부담 분담의 모범

- GDP 대비 3.5% 국방비, 25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포괄지원
 -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브린슨은 한국의 국방예산이 향후 3년의 회계 연도에 걸쳐 연 8.5% 증액할 것이라고 언급⁵
 - 이는 국방비 증액 계획을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일본과 긍정적으로 대비

■ 대만 유사시 한국의 일정한 역할 기대

- 미국은 2025년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에 대만 유사시 기지 활용, 접근권, 최소한의 수동적 협력을 전제하고 있음⁶
 - 동맹을 활용한 미 군사력의 효율적 투사 및 접근 확대는 미 다영역 작전 교리에서 중요한 부분
- 이상적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태도 표명, 경제적 의존도 축소,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등을 원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인정

5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인도태평양양사-주한미군 전력태세 청문회," 제119대 의회, 제2회기 (2025.4.21.). 원문은 "... we stand based on the continued investments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defense really an uplift of about 8.5% in their defense spending over the next three FY" 정황상 연 8.5%로 보임

6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인도태평양양사령부-주한미군 전력태세 청문회," 제119대 의회, 제1회기 (2025.4.9)

2. 한국의 인식과 목적

■ 한반도 중심성

- 한국의 제1 우선순위는 여전히 대북 억지. 미국이 ‘탈한반도 지정학’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 안보의 중심성을 고수
- 3축 체계(킬체인, KAMD, KMPR) 완성이 핵심 과제이며, 자주적이면서 동시에 동맹을 강화하는 독자 역량 구축⁷
 - 한국형 3축 체계: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대북 억제 프레임 안에 위치시켜 자주적 억지력 강화와 동맹 심화를 동시 추구
 - 그러나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CNO Daryl Caudle)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의 대중 억제 임무로 확대를 “당연한 기대”로 공개 언급하여 임무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 표출⁸

■ 주한미군 유지와 확장억제

- 주한미군 사령관의 4성 장군 지위 유지⁹·핵협의그룹(NCG) 심화 희망
 - 확장억제가 ‘조건부’로 변질되거나, 반대로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각각 공존
 -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언급이 삭제된 점은 구성 변화 여지를 남김

■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중이며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FCFC)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목표
 - 이재명 대통령은 미 상원 방문단 방한 시 면담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 (~2028년) 의지를 직접 피력

7 한국국제정치학회 Korea On Point 패널, “동맹 현대화” (2025.12.11), 발표논문집.

8 KBS (2025.11.17). 미 해군 참모총장 “한국 핵잠, 중국 억제에 활용될 거로 기대”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9265>

9 Lee Hyo-jin and Bahk Eun-ji, “Washington could weigh shake-ups of top US commanders in S. Korea, Japan,” The Korea Times, July 10, 2025,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defense/20250710/washington-may-weigh-shake-ups-of-top-us-commanders-in-south-korea-japan>.

- 한국군이 미래연합군사령부(Future CFC)의 사령관직을 맡게 되면 미국은 “중요하면서도 더욱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제공 역할로 전환
 - 브런슨은 2026년 4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환 후 미군이 “서쪽(대중국)을 바라보면서 북한 임무에는 핵심적이되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명
- 전작권 전환 시 주한미군 주둔 지속 및 규모(~28,500명) 유지
 - 미 의회는 매해 국방수권법에 28,500명 병력 하한선(manpower floor)을 명시하는 조항을 반복 포함
 - 주한미군 현상 유지에 대한 미 군부의 지속적 지지 표명: 브런슨은 주한미군 주둔이 “최소 비용으로 비할 바 없는 접근성과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
- 전략사령부 강화 및 전환 비용을 국방비 증액분에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 및 국방비 증가 요구 충족**
- 전작권 전환에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한국군 지휘구조 재편, 새로운 C4I 체계 구축, 추가 전력 획득 등 상당한 비용 수반
 - 정부는 이미 합의한 2035년 GDP 대비 3.5%에 이를 국방비에 전작권 전환 추가 비용을 포괄한 다는 것
 - 미국이 전환 비용을 국방비 증액과 별도의 추가 부담으로 요구할 가능성 차단
- **대중국 관계 관리**
-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유지하면서 호혜적 자세를 추구하나, 미국이 기대하는 전략적 명확성과 차이
 -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산업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경제적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
 - 한국의 전략적 역량 강화의 일환인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이 대중 견제로 명시할 경우 중국과 마찰할 것 우려
- 중국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 지향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제한적 동의
 - 대만 유사시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에 대응 집중 → 한반도 내 역략 집중 강조

III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한미 간 합의점 및 쟁점

※ 부록의 “한미 간 동맹 현대화 합의·이견 영역 대조표” 참조

1. 합의 영역

- 양국 모두 냉전 시대 틀이 부적합하며 동맹이 발전해야 한다는 점과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 동의

- 다방면에서 진일보한 한국의 역할 확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에 부합

■ 방산협력

- 조선 MRO·무기수출은 산업 시너지 확대를 통한 진정한 윈-윈 영역

- 파파로는 2025년 미 의회 증언에서 한국 조선소 MRO를 “미 해군 전방 배치 유지와 미국 조선소 경쟁력 확보의 상호 이익”으로 구체화하여 이 분야에서 양국 입장이 가장 일치함을 확인¹⁰

■ 확장억제와 대북 대응

- NCG 체계, 연합훈련, 정보공유 등에 있어 초당적 지지 존재

- 브런슨은 2026년 4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국이 NCG에 “완전히 참여(participated fully)”하고 있다고 밝힘

- **한국 핵추진잠수함:** 한국의 자주적 억지력 강화와 양자 협력 심화 차원에서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나 미 행정부와 조야 일부는 소극적

- 미국 측이 핵잠 대중 억제 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대북 3축 체계의 자산으로 고려

■ 한미일 3자 안보협력

- 정보공유, 연합훈련, 조율된 작전 차원에서 심화 합의

- 파파로는 한미일 3자협력을 “전략 환경에서의 절대적 밝은 점”으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외교적 확인해 정권을 떠나 연속성을 기정사실화¹¹

10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도태평양사-주한미군 전력태세 청문회,” 제119대 의회, 제1회기 (2025.4.9)

11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도태평양사-주한미군 전력태세 청문회,” 제119대 의회, 제2회기 (2026.4.21)

- 통합 미사일 방어(IAMD) 및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가동된 한미일 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유지 중

2. 쟁점 영역

■ 동맹 현대화 로드맵

- 미국은 이제 한국을 북한에 대한 전방 국가가 아닌 인도-태평양 안정에 핵심적인 글로벌 행위자로 인식
 - 백악관, 의회, 미군은 공통으로 대중 억제력을 우선하지만, 동맹 현대화완료 후 결과에 대한 관점이 다름
 - 백악관 → 한국의 전략적 역량 강화, 미국의 방어 책임 최소화; 미 의회 → 전통적 동맹관계 최대한 유지, 한미일 3자 협력 부각; 미군 → 대중 견제를 위한 인태전략의 핵심 동맹국
 - 백악관 관점이 동맹 현대화를 수평적 동맹·전략적 역량 강화의 기회로 보는 한국의 입장에 가까움

■ 전략적 유연성/전작권 전환

- 미국은 역내 유연성 확대를 추구하나 한국은 '억지력 공백'과 연루/방기 동시 위험을 우려
 -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이해 부합도가 높은 의제지만, 이후 한미 연합군의 임무 범위에 관한 인식 차이 존재
- 전환 프로세스의 종착점으로 한국 주도 한반도 방위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으나 합의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인식
 -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주권 완성의 상징이자 자주국방의 이정표로 접근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임무 전환으로 인식
- 브런슨은 “정치적 편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되며,” 조건 기반 전환을 강조
 - 다만 주한미군은 2029년 1분기까지¹² 전작권 전환을 완성하는 로드맵을 미 국방부장관실(OSD)에 제출하여 시기적으로 2028년 말 완성을 목표하는 한국과의 이견 노출
 - 과도한 동맹 확장은 중국이 북·러와 공조를 가속하고 동맹 회복력을 시험하는 지렛대로 전환되어 통합요인에서 '빼기' 요인으로 변질 가능
 - 미국은 역내 유연성 확대를 추구하나 한국은 '억지력 공백'과 연루/방기 동시 위험을 우려

12 연방 회계연도 2029년 2분기

■ 위협 인식의 괴리

- 미국은 탈한반도, 인도-태평양 전역 동맹을 지향하나, 한국은 한반도 안보 우선 “한반도 중심성” 강조
 - 미국은 대중 견제를 추구하고 중국을 세계적 위협이자 ‘중국·러시아·이란·북한(CRINK)’ 연대의 핵심으로 지칭하며 향후 한미동맹 지향점 제시
- 대조적으로 한국은 동맹의 대중 견제 성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며, 중국과 선별적 협력
 - 이 간극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동맹 내 위협인식의 간극을 외부에 노출하는 신호로 기능
 - 대만 유사시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국 방어에만 국한할 수 없다는 한국에 복합적 메시지 전달

■ 비용 부담

- 미국은 재정 부담 축소를 원하나, 한국은 자강 강화가 지나친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국내 정치적 마찰 요인화 되는 것을 우려
 - 정부는 이미 합의한 GDP 대비 3.5% 국방비 증액이 전작권 전환 추가 비용을 포괄한다는 입장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음

IV 상호호혜적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수평적 동맹

- 상호주의 실체화: 사이버·우주·해상안보 등 다영역과 CNI(핵재래식 통합) 작전 구상에서 한국 비중 확대
- 조선협력, 원자력, 방산R&D, 기술안보 등 상호 이익이 진정으로 수렴하는 영역 확대, 구조적 상호의존성을 창출
 - 한미 조선 협력을 벤치마킹하여 구조적 상호의존성을 창출: 'MASGA 2.0' 구상: 양국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지속해 발굴
- GDP 3.5% 국방비 증액을 미국 압박에 대한 양보가 아닌 포괄적 국방 혁신의 촉매제로 활용
 - GDP 대비 3.5% 국방비 수준 달성, 25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포괄지원 등 한국의 미 국방 기여에 대한 명확한 인식 확립

2. 선제적 동맹 리스크 관리

- 대칭적 동맹을 위해 한국 스스로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미조야 내 동맹 현대화 담론 주도
 - 백악관, 미 의회, 미군의 동맹 현대화에 대한 관점과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국가 대 국가 정책 조율뿐만 아니라 국가 대 (미) 기관 조율을 통해 미국의 통합되고 일관된 입장 유도
 - 동맹 현대화가 가져올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과는 백악관뿐만 아니라 행정부, 의회와 다층적 조율 필요
- 국방비 증액은 한국의 안보적 합리성에 기반해야 하며, 미국의 지시가 아님을 강조하고 국민 설득이 가능한 지표와 논리 필요
- 트럼프가 통상 레버리지로 안보 의제를 무기화할 가능성 대비; 현재 마찰이 없다고 동맹 관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인식
-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명료성 고수: NCG 등 모든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 목표를 명기

3. 중국에 대한 한미 간 적절한 인식의 간극 관리

- 동맹 현대화의 핵심 장애물은 역내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한미 간 위협인식의 간극
 - 미국은 중국을 “급박한 도전(pacing challenge)”으로 규정하고 인태 전역의 세력균형 유지를 최우선시
 - 한국은 북한의 실존적 위협을 1순위로 놓되, 대중 관계에서 외교·경제적 공간을 보전
 - 동맹 내 위협인식의 간극을 외부에 노출하여 외부의 편가르기(wedge) 전략에 이용될 수 있음
- 중국 담론에 매몰되지 않고 한미가 공유할 수 있는 전략 소통 언어(strategic communication language)를 개발해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원활하고 발전적인 한중관계 유지
 - 한미가 공유할 수 있는 중간 지대 정책 용어를 체계적으로 개발, 양측이 공동으로 사용¹³
 - 예컨대 “대중 견제”를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조정
 - 동맹 현대화를 방어적 조치로 담론화하는 정밀 대중외교 필수
- 이를 통해 동맹 현대화를 북한 실존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중립에 대한 논리로 사용하고 비군사 분야 협력 공간 유지

13 반길주. (2025.12.11). 한미동맹 현대화 작동기제 분석: 미국의 시각 진단과 리스크관리 해법 모색 [발제문].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Korea on Point 패널

참고문헌

국문

- 권보람. 동맹 현대화: 한국의 관점.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한국국제정치학회 Korea on Point 패널, 2025.12.11.
- 반길주. (2026). 과도기 국제질서의 동맹 생존 기제 분석: 제도-자산 융합기제와 한미동맹 현대화. 국가안보와 전략, 26(1), 137.
- 반길주. (2025.12.11). 한미동맹 현대화 작동기제 분석: 미국의 시각 진단과 리스크관리 해법 모색 [발제문].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Korea on Point 패널.

영문

- Beaver, Wilson. "Modernizing the U.S.-South Korean Alliance for a New Era." Heritage Foundation. Korea on Point, November 19, 2025.
- Gold, Eli M. "President Trump's Reframing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Alliance or.." Gol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rategy. Korea on Point, December 7, 2025.
- Jo, Beeyun (조비연). "Alliance Modernization." Sejong Institute. Korea on Point, 2025.
- Kavanagh, J. (2025, October 4). A stronger alliance requires a self-reliant South Korea. Korea on Point.
- Lee, Ho-ryung (이호령). "Recommendations for the Success and Future Trajectory of ROK-U.S. Alliance Modernization." KIDA. Korea on Point, October 6, 2025.
- Lee, Sung-hoon (이성훈). "Alliance Modernization: Recommendations for Success and Future Direction." INSS. Korea on Point, October 5, 2025.
- U.S.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the Posture of U.S. Indo-Pacific Command and U.S. Forces Korea." 119th Congress, 1st Session (April 9, 2025).
- U.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the Posture of U.S. Indo-Pacific Command and U.S. Forces Korea." 119th Congress, 1st Session (April 10, 2025).
- U.S.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the Posture of U.S. Indo-Pacific Command and U.S. Forces Korea." 119th Congress, 2nd Session (April 22, 2026).
- U.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the Posture of U.S. Indo-Pacific Command and U.S. Forces Korea." 119th Congress, 2nd Session (April 22, 2026).

언론 보도

연합뉴스. (2025.8.8). 美 “동맹현대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 확보 위한 것.”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8152100071>

한국국제정치학회 Korea On Point 패널. “동맹 현대화.” (2025.12.11). 발표논문집.

KBS. (2025.11.17). 미 해군 참모총장 “한국 핵잠, 중국 억제에 활용될 거로 기대.”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9265>

Abstract

Finding Equilibrium in the ROK–U.S. Alliance for Mutually Beneficial Alliance Modernization

Go Myong-hyun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alliance modernizat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is necessary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yet it simultaneously carries considerable strategic risk. The expansion of the alliance's operational scop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 the Indo–Pacific is strategically inevitable, and this process will be accompanied by challenges in burden–shar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friction with neighboring states. The alliance must become more reciprocal and Korea's role must expand, but Korea must proactively manage this transition in a direction that minimizes the fallout from great power conflict.

Following the respective releases of the 2nd Trump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U.S. perspective on alliance moderniz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clear. The April 2026 hearings before the U.S. Senate and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s demonstrate that the alliance modernization concept has been substantially elaborated. At the same time, they reveal a subtle divergence in the orientation of alliance modernization between the White House, which seeks to reduce the burden of Korean Peninsula engagement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Korea's strategic capabilities, and Congress and the U.S. military, which seek to incorporate Korea as a central pillar of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success of alliance modernization hinges on three conditions. First, the realization of a reciprocal alliance through multi–domain cooperation and the creation of mutual dependencies in defense industry and shipbuilding. Second, preemptive risk management

through Korea-led agenda-setting and multi-layered coordination among the White House, Congress, and the U.S. military. Third, managing the divergence in China threat perceptions that creates gaps between the ROK and U.S. through a shared strategic communication language.

Keywords: Alliance Modernization, ROK-US Alliance, Indo-Pacific Strategy, Korean Peninsula

부록: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한미 간 합의·이견 영역 대조표

이슈	합의 영역	이견 영역
동맹 발전 필요성	한 -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필요성 공유 - 냉전 시대 틀이 부적합하며 동맹이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	- 한반도 중심의 동맹 및 방어태세 - “탈한반도 지정학”을 반대하고 “한반도 중심성”으로 정식화
	미 - 현재 위협과 역량에 부합하도록 동맹을 현대화 - America First ≠ America Alone; 역량 있는 동맹국과 함께하는 억제력 재건 강조	- 동맹 현대화 = 부담분담 확대 · 인태 전역 대중 억제 재배치 - 브런슨 구상: 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 대북→인태 임무 전환
전작권 전환	한 -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 수용,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 의지 피력 - 한국군 주도 한반도 방위 확대라는 도착점에는 양측 수렴	- 전작권 전환을 주권 완성의 상징 · 자주국방의 이정표로 인식 -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완료와 주한미군의 조건부 완료 차이
	미 - 조건기반 전환 재확인, FY29 2분기까지 로드맵 계획 -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역량 강화를 전환 여건 성숙으로 긍정 평가	-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임무 재배치(지역 임무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 - 브런슨: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된다” 조건 미충족 시 조기 전환에 대한 완곡한 거부
방산협력· 조선 MRO	한 - 미 해군 MRO 참여로 역내 거점 입지 강화 - 미국이 신뢰하는 핵심 공급망 편입	*한미 간 이해부합도 최고 시너지를 통한 진정한 윈-윈
	미 - 미 해군 준비태세 개선 · 미 조선소 경쟁력 확보	
확장억제	한 -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 연합훈련 · 정보공유에 대한 초당적 지지 - 북한 핵 · 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협력 심화가 한반도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공감	- 확장억제가 ‘조건부’로 변질되거나 그 범위가 중·러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미 - 북한의 핵선제사용 교리, ICBM 고도화,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환류를 공통 위협으로 인식 - 확장억제와 전술핵 역량 유지 필요성에 초당적 합의	-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 - 북한뿐 아닌 포괄적 위협 대상 시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 - 2006년 한미 합의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이해’ 바탕한 제한적 전략적 유연성 - 주한미군 규모 및 사령관4성 장군 지위 유지	- 대북 억제가 제1우선순위: 동맹의 탈한반도 확대는 선별적으로 추진 - 억지력 공백 · 연루/방기 동시 위험 우려— 전략적 유연성 확대 시 한반도 방어 공약 약화
	미 - 확장억제와 전술핵 역량 유지 필요성에 미 조야 초당적 합의 - 2025.11 팩트시트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최소한의 현상유지 수준’으로 봉합	- CRINK 프레임워크: 중국을 전세계 공통 위협으로 규정, 북 · 중 · 러 3국 공조 구조를 공개적으로 명시 - 주한미군을 ‘제1도련선 안쪽’으로 규정, 대중 비용부과(cost imposition)의 위치적 이점 부각

이슈		합의 영역	이견 영역
비용 분담· 국방비	한	- 한국의 국방비 증액 향후 3년간 연 8.5% 증액 - 연간 약1.4조 원(≈10억 달러) 규모 주한미군 현물 지원, 연간 약5억 달러 건설 사업 기여	- 250억 달러 무기구매 · 330억 달러 포괄지원에 대한 미국의 직접 관여 · 재촉 가능성에 대비
	미	- 한국의 증액 계획과 현물 기여를 비용 대비 최고의 접근·억제력 제공으로 평가 - 한국이 비NATO 동맹국 최초로GDP 3.5% 공약에 합의한 점을 모범 사례로 인용	- 이란전에서 한국 및 기타 동맹의 지원 요청 - 트럼프: 미흡한 태도 질타
한국 핵추진 잠수함	한	- 자주적 억지력 강화 차원, 조선 협력 핵심 어젠다로 부상, 동맹 심화 동시 추구	- 대북 억제 핵심 자산으로 국한해 임무 범위를 한반도 방어로 한정
	미	- 트럼프 대통령 건조 승인	- 미 해군: 한국 핵잠의 대중 억제 임무는 당연한 기대 - 인태 억제 아키텍처에 자연스럽게 편입하는 시각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한	- 정보공유, 연합훈련, 작전 조율 강화 합의: 탄도 미사일방어 등 구체적 성과	- 위협인식 선행: 공유 위협인식이 선결요건, 기반 없는 작전 확대는 균열 초래 - ‘특정국가 미명시’ 원칙 적용 선호
	미	- 동북아 전략 환경에서 최대 긍정적 요인 -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 RIMPAC 한국 최초 해양 지휘, 발리카탄 훈련 일본 최초 참가	- 행동 선행론: 3자 안보협력과 공동훈련 자체가 위협 인식의 공유 방증 - 협력과 참가가 3자 간 정치적 연대로 이어짐
대중 입장	한	-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남·동중국해, 대만 군사적 위협)가 역내 안정을 저해한다는 일반적 인식 공유	- 대중 포용외교: 국익 중심 무역 구조화 강조, 명시적 대중 견제 언어 부재
	미	- 중국의 공세적 행동이 역내 동맹국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 합의	- 경제적 의존도 축소,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 대만 유사시 입장 명료화를 명시적으로 촉구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June 2026

No. 383